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성 명	신수정	직 급	행정주사	
훈련국	미국	훈련기간	2024.5.20.~2025.5.19	
훈련기관	Center on Technology, Data and Society (CTDS)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ASU), 행정대학원 부설 연구소		보고서 매수	157매
훈련과제	문화콘텐츠 분야 인공지능(AI) 윤리지침 연구			
보고서 제목	문화콘텐츠 분야 인공지능(AI) 윤리지침 연구			
내용요약	아래 참조			

요약서

문화콘텐츠 분야 인공지능(AI) 윤리지침 연구

○ 최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은 전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PwC(PricewaterhouseCoopers) 연구에 따르면 2030년 AI는 글로벌 GDP를 약 14% 증가시키며, 약 15.7조 달러의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콘텐츠 산업에서도 콘텐츠 제작, 배포, 소비 전 과정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는 영화·음악·게임·광고 등의 콘텐츠 제작에 직접 활용되면서, 산업 전반의 운영 방식에 전환을 가져오고 있고, 이에 따라 생성형 AI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운영 이익률을 14.4% 포인트까지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처럼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AI가 만들어내는 편향된 정보,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등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도 동반되고 있다. 이로 인해 AI 윤리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정책적 대응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자국의 정책 환경과 이해관계에 기반해서 서로 다른 규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각국 정부와 AI 기업은 시장 진출 대상 국가별로 서로 다른 규제 환경에 균형을 맞춰 정책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인 EU 인공지능법(AI Act)의 체계 및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글로벌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AI 윤리지침 및 행정명령의 원칙과 체계,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EU의 AI 윤리지침 및 규제 체계를 비교·분석하였고, 국제 표준 정비를 위한 양측의 협력 동향을 검토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세계 AI 규제 표준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미국과 EU의 AI 윤리지침 및 규제에 대한 주요 글로벌 AI 기업들의 대응 현황과 전략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우리 정부와 기업의 향후 정책 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법령 및 정책 분석, 사례 분석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였고, AI 윤리 지침 및 규제 분석은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범용 AI 및 생성형 AI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연구 분석 및 검토 결과, EU는 위험 기반 접근법을 중심으로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여 위험 수준별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강력한 법적 의무와 과징금을 통해 AI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국제 무역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 등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AI 시스템이 생성하는 결과물이 EU 내에서 사용되기만 해도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역외적용 규정, 제3국 범용 AI 모델 공급자의 제품 출시 전 EU 내 공인 대리인 지정 의무 규정, 소스 코드를 비롯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범용 AI 모델 내부 접근 허용 요구, AI 시스템의 투명성 요건 강화 등을 통해 EU의 AI 규제를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법 규제를 통한 기술적·윤리적 통제를 수단으로, EU의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거버넌스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미국은 AI 규제에 있어서, 포괄적 규제 방식을 채택하기 보다 특정 영역별 규제 접근 방식(Sectorally Specific Approach)을 취하고 있다. 즉, 기존 산업별 법률과 표준을 활용하면서, 윤리지침과 행정명령을 추가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세계 AI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미국과 EU의 AI 윤리지침 및 규제에 대한 글로벌 AI 기업들의 대응 현황 및 전략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스탠포드 대학 파운데이션 모델 투명성 지수(The Foundation Model Transparency Index(FMTI)) 보고서와 주요 AI 모델의 시스템 카드 및 모델카드를 분석하였다.

검토 결과, 글로벌 AI 기업들은 국가별 규제 요건에 맞추어 시장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문서를 공개하고, 법적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자율적 내부 정책 강화를 병행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아가, 현재 글로벌 AI 규제 환경은 단순히 AI 기술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데이터 보호 및 기술 산업 보호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국가 안보를 근거로 데이터 보호 및 타국 기술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틱톡(TikTok) 강제매각법 사례, 강력한 AI 및 데이터 규제로 기업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EU의 애플 과징금 사례(경쟁법, 디지털시장법), 데이터를 국가 전략 자산

으로 간주하여 데이터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규제에 따라 중국 현지 데이터 저장 정책을 적용한 테슬라의 사례는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이 같은 글로벌 AI 및 관련 데이터 규제 환경 변화 흐름에 따라 우리 정부도 뉴욕구상 ('22.9.21.), 파리 이니셔티브 ('23.6.21.), AI 서울 정상회의 ('24.5.21.) 등을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23.9.25.), AI 기본법 제정('25.1.21.) 등 체계적인 법제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 AI 및 데이터 규제는 기술 발전, 시장 경쟁, 국가 안보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기적인 규제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지속적인 국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은 글로벌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국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과정에 확고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이러한 노력을 이어간다면, AI 기술혁신과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글로벌 AI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